

## 「暴雪被害에 따른 特別 支援對策 促求」

### 建 議 案 採 擇

지난 3월 5일 충남도내 최고 45cm의 폭설이 내려 시설원예하우스나 축사 등 잠정적으로 총 2,6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어민의 영농의지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폭설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우리 농어촌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현재의 아픔을 딛고 영농을 조기에 재개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의 표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특별 재해지역 지정」요건은 하절기 풍수피해를 중점 고려하여 설정한 것인 만큼 이번 폭설로 피해 농어민의 생계가 막막하고 회생이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금번 폭설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줄것과

둘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시설원예하우스 복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니 철거비용 및 신규설치 복구 비용을 현실화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현재 농작물 피해시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액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너무나 미약함으로 농작물 피해시 지원액을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 농어업인 대부분이 기존시설 담보설정과 신용대출 등으로 부채를 안고 있어 재건축 복구시 추가담보가 어려워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 하여 농어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니「재해로 인한 특별신용보증」으로 재융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어업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함으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특별 지원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 모든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영농을 재기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 3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 신행정수도특위활동상황 보고

- 충청권 광역의회 공조 및 이전분위기 조성에 한몫 성과 -
- 특별법 통과 등 새로운 여건에 부응, 지속적인 공조체제 유지키로 -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로 특위 명칭 변경-

도의회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전)는 신행정수도특위 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특위 구성 이후 주요 활동상황을 종합 보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상전 위원장은 도의회 신행정수도특위는 특위 구성이후 ▲충청권광역의회의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 운영(2003.5.30)하였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건의(2003.6.23),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2003.9.15) 등과 함께 수차례의 워크숍 개최와 정책 토론회 참여를 통해 도민적 분위기 확산과 지역공감대 형성을 주도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5일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 식발식과 함께 규탄성명 채택하여 정치권 및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도의회 신행정수도 특위는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특별법 국회통과 문제보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차질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공조체제를 더욱 탄력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입지예정지 확정시까지 특별법 통과로 인한 새로운 여건에 맞게 특위 명칭을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3개 시도의회가 지속적인 공조활동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완 도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신행정수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정종학 의원(천안 4)은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 상황으로 신행정수도충청권 건설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나"고 묻고 "현재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나"고 따져 물었다.

홍표근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홍보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이용면(예산 1)은 "행정수도충청권이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최운용 의원(공주 2)은 "타 시도의 경우 행정수도관련 호재를 이용하여 공업단지 유치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발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3월 16일(화), 도의회 운영상황

- 상임위별 현안사항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
- 신행정수도특위 활동상황 종합보고 청취 및 활동방향 논의 -
-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금산), 민주당 탈당 -

충남도의회는 16일 각 상임위와 신행정수도특위를 열고 소관별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추진상황 및 2005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교사위는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농경위는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청취 및 점검하였으며, 건소위는 충청남도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도의회는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위]를 열고 그동안의 특위활동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한후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특위 명칭도 변경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원장인 심정수 의원(금산)은 오전 10시 40분 도청 기자실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 〈 행정자치위원회〉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2005 중기재정계획 보고 청취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는 16일 오전 10시30분, 위원회를 열고 임현용 도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또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역사문화연구원 설립추진상황 보고에서 정종학 의원(천안4)은 "역사문화원 재정운영 수입예산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억원씩 계상한 것은 걱정된 예산계상인지,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찬규 의원(보령2)은 "백제역사문화발굴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역사문화원 직원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는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기금을 은행에 적립시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기대가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원 예산을 자체 수주세입액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도에서 지원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종건 의원(홍성 1)은 "문화원장의 연봉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냐"고 묻고 "2003년도 수탁사업 30억원은 충남발전연구원 전체수탁사업예산인지, 역사문화원으로 분리한 순수 역사문화원 수탁사업예산인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5년도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에서 정종학 의원(천안4)은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 하는 이유"와 "장기적인



전망에서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에서 소폭 적용하여 반영된 사유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종건 의원(홍성 1)은 "지방교부세가 15.0%에서 18.3% 인상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것인지, 양여금과 교부세중 어느세입이 더 지원받는 효과가 있는지"와 "논두렁 바로잡기운동 일환으로 소규모 경지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의 일부년도부터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사유는 뭐냐"고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

#### -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병기)는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은 "신설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위치 선정 및 설치에 있어 시지역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단위 지역에 시지역과 형평성 있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남계 의원(자민련 비례대표)은 "충남서산 평생학습관의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능별 인원 배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최운용 의원(공주 2)은 "도교육청이 평생교육보다 초, 중등 교육에 주력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은 뭐냐"고 물었다.

이용면 의원(예산 1)은 "사전에 학습관을 건설하고 사후에 권역별로 구별하여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민기 의원(천안 1)은 "평생학습관 소재지외의 인근 시군 지역의 도민과 학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재지 지역에 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 -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출연금 현황 및 해외투자 타당성 추궁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민구)는 노태홍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송민구 위원장은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취지와 기능성 건강식품 시범사업 추진상황, 해외 농업개발 예산이 없는데 현재인력으로 컨설팅이 가능 여부 및 해외농업개발지원에 투자 타당성" 등을 따져 물었다.

송영철 의원(논산 2)은 "출연금과 관련하여 농협충남지역본부 5억원 중 4억원이 미출연 되었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고, "지난해 5월 2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는 출연금목표액 40억을 우리도가 5억원, 시군별 1억원씩 15억과 향후 20억원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캐물었다.

명귀진 의원(태안 1)은 "해외 농업개발지원에 따른 200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며 이 사업으로 우리 농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다.

김기영 의원(예산 2)은 "운영방침에서 도내 농업 경영체를 정회원제로 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뭐냐"고 물었다.

## 3월 15일(월), 도의회 운영상황

충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15일 제177회 도의회 임시회 7일째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폭설피해대책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기타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도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을 예비 심사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예비심사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위원회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원안대로 심사했다.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종건(홍성1, 한)의원은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을때 납세의무자가 행정의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오찬규(보령2, 자)의원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적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용해(당진2, 자)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확대 조정하게된 배경과 현재 구성현황"에 대해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폭설피해 복구대책 등 지원 촉구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병기)는 도교육청 최청송 교육국장으로부터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기타 교육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유병기 위원장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에 내실을 기하여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폭설피해의 복구 대책은 우선 도 교육청에서 긴급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최근 일선학교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영환 의원(서천1, 자)은 "수준별 이동수업, EBS 방송청취, 외래강사 초빙 활용 등이 주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도시지역 보다는 우리도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농어촌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운용 의원(고주2, 자)은 "현재 공교육이 입시위주의 학원화되어 가는 것같아 우려스럽다"며 "기초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는 좀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성남 의원(서산2, 자)은 "우수강사 초빙활용 계획에 있어 기존 선생님들과 초빙강사간의 교직원 및 학습방법 등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느냐"고 묻고 "교육시설물 건축에 있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기 의원(천안1, 한)은 "EBS 강의 청취를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습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준 의원(연기 1, 한)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중 EBS 방송을 청취하는 계획이 있는데 도내 난청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나"고 묻고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대책중 영어 교육의 경우 실질적인 우수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선홍 의원은 "원의중학교 기간제 교사 교직원 사건의 경우도 일선학교의 인성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교직원의 인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 - 한·칠레 FTA 체결 및 폭설피해농가 지원대책 점검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민구)는 박윤근 도농림수산국장으로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폭설피해에 따른 대책을 보고 받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영호(청양2, 자)의원은 "재해발생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데 2001~2004년부터 현재까지 풍수해 발생 시기별 현황과 피해발생으로부터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시 소요일수와 지원이 늦은 경우 원인은 무엇이나"고 따지고, "시설하우스피해의 경우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농가가 원상복구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농민이 실제 복구시 평당가격과 정부지원시 차액에 따른 지원대책과 또 피해농가 지원시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도의 현황과 시설자재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송영철(논산2, 자) 의원은 "재해발생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피해가 표준설계대로 이행치 않아 피해가 큰 것 같은데 표준설계 이행시와 미이행시 충남도의 견해는 무엇이나"고 묻고 "금번 폭설피해의 경우 어떤 제도적 기준에 의해 어떤 자금이, 이율은 몇%, 보조금은 얼마가 지원되는지 피해주민이 잘 모르고 있다"며 홍보활동과 함께 대처요령, 미담사례 등을 수록한 사례집 발간을 제안했다.

이준우(보령1, 자)의원은 "사상 유래없는 폭설피해로 피해 농민이 하루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폭설보다 많은 양의 폭설과 폭우에도 견딜수 있는 건축설계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민구 위원장은 "피해농가 면적산출시 작물에 대한 피해면적이 농가의 총소유 면적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지원과는 괴리가 있다"며 이농·전업시와 우사를 돈사로, 돈사를 우사로 변경시에도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도록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宋위원장은 또 "한·칠레 FTA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임대사업으로 농업시설물을 지어서 농민에게 임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